

1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377.91 (-1.81)	781.98 (+0.81)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3.400 (-0.073)	1313.00 (+9.30)

[경제종합]
新 EU 배터리 규제
현황과 대응 전략
04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m-커버스토리

공익법인·사립대학 등 비영리부문 ‘깜깜이 회계’ 여전

회계개혁 시각지대

자산 1000억 이상 공익법인 대상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도 사학기관 부정적발 등 개선 안돼 실질적인 감사시간 부족 지적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신(新)외부감사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 4년여가 흘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을 어느정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비영리 부문은 여전히 사회적 감시망을 벗어난 회계개혁의 시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2021년	지방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 (지방보조금관리법)
2022년	공익법인과 사립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립학교법)
2024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부감사 대상 확대 (공동주택관리법)

16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사립대학과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 개선을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4+2)가 도입됐다. 4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2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

다. 해당 제도는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기업이 먼저 ‘6+3’을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고, 비영리 부문에도 감사인 지정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 위원장의 노조비 횡령 사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 휘문고의 사립학교 회계 부정 논란,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등 각종 비영리법인의 내부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횡령 의혹 이후 비영리부문의 회계처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더 대두됐다”며 “비영리법인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점에서 공시같은 장치가 있는 일반기업보다 오히려 회계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실시된 사학기관의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 부정회계처리가 적발되는 등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질적인 회계감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령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학기관들은 회계기간 종료 후 3월 이내 결산을 마쳐야 하는데, 시행규칙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결산심의를 확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회계감사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3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尹 “셔틀외교 적극 환영... 새 시대 함께 노력”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차 오사카를 방문한 이후 4년 만의 정상 방문이다. 또한, 양자 정상외교 차원의 일본 방문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교토를 방문한 이후 12년 만이다. <관련기사 2면>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다. 의장대 사열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

은 기시다 총리의 안내로 관저 내부로 이동해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어진 확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께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오늘 아침 제가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 장

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회담에서는 그간 정체되어온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님이 말한 양국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정부 전략산업서 쪽 빠진 SW 삼성 등 인력 육성 ‘각자도생’

기업 경쟁력 좌우 SW 역량 강화 현대차, 세 자릿수 경력직 채용 중후장대 제조기업들 판교 이동 IT업계 모여 인력들 유치 유리해

산업계가 4차산업혁명으로 소프트웨어(SW) 역량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은 적극적인 반면 소프트웨어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15일부터 세자릿수 규모 ICT 분야 경력직 채용을 시작했다. 채용 분야는 13개 직무로,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비롯해 대부분 IT 부문에 집중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역량으로 보고 있다. 하드웨어 기술력이 상향평준화 된 데다가, 자율주행이 확대하고 커넥티드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비중이 높아지는 등 소프트웨어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완성차뿐 아니다. 삼성중공업과 두산그룹에 이어 현대제철과 HD현대 등 전통적인 ‘중후장대’ 제조 분야 기업들은 최근 앞다퉀 판교로 본사를 옮겼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협력이 확대되는 IT 업계와 거리를 좁히는 것은 물론, 판교에 집중된 IT 인력들을 유치하려는 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자 업계는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국내를 벗어나

전세계에 R&D 거점을 확대하고 현지 인력 확보에 힘을 쏟을 정도. 이재용 회장과 구광모 회장 등 총수들까지도 해외 출장길에 관련 전문가들을 직접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학기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육성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반도체 등 제조업 지원과 비교해서는 그 규모가 부족한 지적이다. 산업계 전반에 소프트웨어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은 뒤쳐진 상태이다. 정부는 여전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전산학 박사 1호인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투자 전략에 소프트웨어 분야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소프트웨어는 제조업과는 달리 재고가 없는 순수 두뇌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글로벌 경제 변동 속에서도 안정적이지만, 제대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국내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형국이다. 삼성전자가 SSFAFY로 연간 1000명 수준 전문가를 키우는 등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LG도 계열사별로 다양한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도 소프트웨어 부트캠프로 동참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외 R&D 거점을 확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재용 기자 juk@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개발 비방 게시물에 “즉각 삭제 강력히 촉구” /사진 뉴시스
▲ 민주당, 이낙연 영구제명·박지현 탈당 청원 거부... “동지 공격 중단해야”

▲ 여, 北 미사일 도발에 “미친개엔 몽둥이 찜질이 답”
▲ 여당 “‘자주통일민중전위’ 총격적... 대공수사권 이전 백지화해야”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사진 뉴시스
▲ 이준석 “인터넷에 통신사 틀게이트? 과도한 접속료 부과 안돼”